

국민안전 - 국민건강 주제 올해 정부업무보고

1. 보건복지부

- 먼저,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**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**한다.
 - 감염병 **유입 방지**(검역 강화), 24시간 **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** 구축,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,
 -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, **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** 개발,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**백신 자체개발** 등 **R&D**를 추진한다.
 - **결핵은 잠복결핵** 검진(50만명), **고위험군** 검진(12만명)을 통한 조기발견,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**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**.
- **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**를 강화한다.
 - **권역의상센터** 지원을 강화하고 **의상전문인력양성·수가체계**를 개선하며, **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**를 **확대**(9→13개소)하여 **의상·응급의료체계**를 강화한다.
 - **재난의료**는 매뉴얼, 교육,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, **상황실 24시간** 운영, **현장 출동** 등 지원하고, 국가 **재난트라우마센터**를 설치한다.
 -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**필수의료 인프라**를 갖추고, **공공의료 인력** 양성을 추진하며, 상반기 내 **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**을 수립할 예정이다.
- **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**를 구축해 나간다.
 - 먼저,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**신고·대응체계** 개선, **인력·장비** 등 인프라 강화, 적정 운영을 위한 **수가 개선** 등을 추진한다.
 - **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** 활성화, **환자안전 개선활동** 지원 등을 담은 **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**(18~22)을 마련, 추진할 계획이다.
- **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**를 예방한다.
 - **자살 예방**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**자살고위험군 발굴·개입**

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,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.

- **암검진 질 향상, 건강검진 확대**를 추진하고, **금연문화 확산**과 **비만·음주 폐해 예방** 및 **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**를 지원한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
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.
 -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, 가정용 계란은 세척·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.
 - 또한, 유해물질 분석·평가·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,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.
 -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,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어린이·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.
 - 어린이·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·영양관리를 지원하고, 혼밥·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.
 - 생리대·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, 필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.
-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,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·심사 체계를 마련하고,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.
 -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.
- 국민과 함께 식·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.
 -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·의약품에 대한 '국민 청원검사제'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.

3.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·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.
 - 첫째, 토양·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-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,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(18년: 252억원)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.
 -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*하고,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,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.
 - * 모든 농약(현재 9종) 판매 시,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
 -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,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,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.
 - 둘째,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.
 -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,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·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.
 -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, '10~'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(4,751개)를 '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.
 -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,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.
 - * 사육밀도, 암모니아 농도, 축사조명,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 마련
 - 기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.
 - 아울러, 살충제 관리 강화, 산란계(대규모)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,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.
- 셋째, 건강·안전·안심으로 소비자·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.
 - 초등학교 돌봄교실(24만명) 과일간식 제공, 천원의 아침밥(20개 대학) 확대와 함께,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.
 -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,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·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.
 -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, 생산·소비, 안전,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4. 해양수산부

-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(60kg)에 걸맞게 **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**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- 먼저,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**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**하고, **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** 및 **오염퇴적물 정화**를 추진하여 **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**해 나갈 계획이다.
 - ‘해양공간계획법’을 제정하여 **先계획 後이용**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 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,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**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**할 예정이다.
- 또한, **친환경 양식으로 패리다임을 전환**해 **사육수 정화처리시설, 고품질 배합사료, 우수종자를 개발·보급**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.
 -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**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**를 조성하고,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.
 -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**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**을 만들어 **양식현장에 보급**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아울러,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**수산물 유통인프라**를 구축할 계획이다.
 - **안전성검사 강화, 수산물의약품 오·남용 방지,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**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 - 그리고 **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,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(FPC, 3개소)**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 - **양식장 HACCP 등록 확대,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**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5. 환경부

- 환경부는 ‘**지속가능한 발전**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**국가 지속가능성 제고**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.
 -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, 이행 전략·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**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**한다.
 - 환경을 고려한 **급전우선순위 조정, 에너지 세제 개편(부처협업), 환경영향평가 혁신, 국토-환경 정보 통합관리** 등을 추진한다.
- 또한, 국민이 체감하는 **환경 질 개선**을 위하여 **물 문제 해결, 체감 대기 질 개선, 화학안전망 구축** 등을 추진한다.
 - 유역 기반 **수량·수질 통합관리체계**를 구축하여 **물 문제를 해결**하고, 국내 뿐 아니라 **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**한다.
 -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,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, 시장 감시 등 **제조·수입, 생산,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**을 구축한다.
- **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**을 위해 **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**하고, **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**한다.
 - **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(석면, 미군기지, 수돗물, 환경영향평가 등)는 선(先) 공개 원칙**을 적용하고 **공개 범위를 늘린다**.
- 또한 **환경사업의 혁신성장**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.
 -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**사업 모델**을 발굴하고, **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** 등으로 **환경산업을 육성**한다.